

대통합 바람... '소통합민주당' 흔들

김효석·양형일 의원등 "탈당 불사"

광주·전남 정가·시민단체도 압박

광주·전남지역 여론을 진원지로 한 범여권 대통합의 태풍이 통합민주당을 흔들고 있다. 우선 구 민주당과 구 중도통합신당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단순한 의견 개진 차원을 넘어 여차하면 탈당 등을 포함한 집단 행동에 나설 기세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도 대통합 흐름에 합류하면서 대통합론은 이미 당 내외에서 대세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김효석 통합민주당 의원은 3일 서울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된 '대통합 국민원탁회의'에 참석, "대통합이 안 되면 저부터 내년 총선 출마를 포기할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김 의원은 이어 "민심이 대통합을 원하고 있는데 통합민주당이 민심과 달리 거꾸로 간다면 결심할 시기가 오게 될 것"이라며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체일병 통합민주당 의원도 "7월에도 대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8월에는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구 민주당 소속 대통합과 의원들의 동반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효석, 체일병, 이낙연, 신중식 의원 등은 지난 주말 박광대 광주지사와 박준영 전남지사 등과 함께 한 '8인 회동'에서 당 지도부가 대통합에

미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탈당 등을 포함한 진로를 함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양형일 의원을 중심으로 서재관·변재일·유필우·박상돈·장경수·주승용·노현송 의원 등 구 중도개혁통합신당 출신 의원 8명도 이날 오후 오찬 회동을 갖고 "통합민주당 내에서 자체 경선을 통해 독자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

양형일 의원의 주도로 열린 이날 회

동에서 의원들은 "당내 일각에서 독자 대선 후보 선출을 고집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같은 입장은 당내 경선을 통해 독자 후보를 선출한 뒤 범여권 제정과 후보들과의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 박상헌 공동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추후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양 의원은 "김효석, 이낙연 의원 등과 이번 주 내에 회동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 및 정가에서도 대통합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합을 위한 국민경선 광주·전남시민연대는 3일 광주시의회 기

자실에서 2차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재창출을 위해 통합민주당은 대

통합과 국민경선이라는 역사적 흐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통합을 또다시 촉구했다.

이번 제안자 명단에는 특히 정종득 목포시장, 서삼석 무안군수, 황주홍 강진군수, 송광운 북구청장 등 광주·전남 자치단체장 4명과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등 지방의원 71명이 포함되는 등 모두 2천147명의 시민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1차 발표 명단을 포함하면 이날까지 5천여명의 시민이 대통합 제안에 서명한 것이다.

이들은 또 대통합 청원을 위해 시민 청원단을 구성한 뒤 4일 민주당을 방문, 지역민심을 전달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정세균 당의장, 정대철 전 고문, 천정배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이 3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대통합 국민 원탁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강봉균의원 합의 추대

정책위의장 이상열의원

중도개혁통합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한 중도통합민주당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재선의 강봉균 의원을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했다. 통합민주당은 또 정책위의장에 이상열 의원을 선임했다.

강 신임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보수적인 한나라당이나 급진적인 진보세력과 차별화되면서 중산층 이상을 안심시키고 서민층에게 희망을 주는 개혁 노선을 추구하겠다"며 "중도개혁세력 대통합의 중심으로서 화합하는 원내가 되도록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광양항 배후단지 등 인프라 확충 급선무

해수부 '광양·부산항 경쟁력 강화위 4차 회의'

물동량 부족과 부산·인천항에 둘러싸여 동북아 물류 허브라는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 인프라 확충 및 물동량 유치활동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광양·부산항 경쟁력강화 위원회 4차 회의'에서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의 차질없는 확충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서는 2008년까지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194만4천㎡를 조성하고, 서측 193만 4천㎡는 오는 2011년까지 마무리해

컨테이너항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물류활동의 기반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양항의 자체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신규 물동량의 유치활동도 강조했다. 새로운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유럽이나 북미의 대형 수입업자 등 동북아에 생산·물류거점이 필요한 대형 기업을 발굴해 집중공략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세계적인 화주나 선사를 대상으로 한 타깃 마케팅과 포트 세일즈활동을 통해 광양항의 환적화물 유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각종 인센티브 시행을 통해 글로벌 선사들의 광양항 이용을 촉진하고, 항만하역 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여기에도 광양항 서측 배후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통해 제조·물류·유통·무역활동을 촉진하고, 항만과 배후단지·산업단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항만클러스터'를 조성해 항만경쟁력 제고 및 배후산업기반 구축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울진산단 일부(33만㎡)를 항만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unipark@

4기 민선자치 1년

6선심행정에 멎든 기초질서

아무데나 주차·쓰레기 투기 손놓은 단속... 판치는 불법

1995년 시작된 민선자치 이후 과거 관선 단체장 시절의 상부 눈치보기와 복지부동, 권위주의적 관행행정의 폐단은 대부분 해소됐다. 특히 4년의 임기가 보장된 민선 단체장들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독립적으로 행정에만 매진할 수 있다.

그러나 민선단체장의 발목을 잡는 게 있다. 바로 표를 가진 유권자들이다. 유권자들이 주민들의 각종 청탁성 압력 또는 로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단체장이다. 당연히 주민들의 불만을 살만한 각종 단속이나 행정적 처벌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이런 현상은 기초질서의 실종이란 민선자치의 또 다른 그림자로 표출된다.

게 옆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심하면 차량 교행이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의식해 못본 채 지나치는 일이 허다하다.

비단 주정차 뿐만 아니다.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와 서구 상무지구 등 광주시내 신흥 유흥가에는 술집과 모텔들이 내 건 불법 현수막과 불법 포장마차가 즐비하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밤만되면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산림을 몰래 훼손하거나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가끔 있지만 적발되더라도 '민원' 차원에서 눈감아주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솔직한 토로다. 유흥업소나 음식점에 대한 식품위생법 단속도 매물처가 하기는 어렵다. 좁은 지역에서 시장·군수를 잘안다며 비탈라고 하면 단속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 상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을 예견해 자치단체들은 지역을 바꿔 교차 단속을 벌이지만 효과는 별로다. 위반사실을 밝혀내 통보하더라도 행정 처분권을 갖고 있는 해당 자치단체가 미약하게 처리하거나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리면 그만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군 교차단속 적발 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지역시민단체 등이 감시를 강화해 선심행정에 따른 부조리를 줄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표 떨어질라" 유권자 눈치보기

주정차 단속 건수 10년전과 비슷

불법주정차와 쓰레기 불법투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불법 광고물이나 포장마차, 노상 적치물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단속 행정은 갈수록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느슨한 단속은 선심행정과 다름없으며 결국에는 기초질서를 망가뜨려 민선자치 자체를 후퇴시키고 있다.

최근 광주시가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기초질서 바로잡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민선단체장들은 평상시 유권자들의 민원을 의식해 면피성 단속에 그치고 있다.

물론 불법주정차 스티커 한 장을 갖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있을 정도로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다음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단체장들은 단속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발 정도를 고려해 강약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반영하듯 민선자치가 시작된 1995년의 광주지역 5개구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와 민선 10년 시점인 2006년의 연간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각각 17만2천건, 18만 8천건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95년 22만6천대에서 2006년 44만9천대로 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건수는 제자리를 잡고 있는 셈이다.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도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16만~19만건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불만을 살만한 주정차 단속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농촌지역이 많은 전남도 다를 바 없다. 목포와 여수, 순천, 광양 등 시지역과 군 단위 읍 소재지에서는 단체장 선거가 다가오면 주정차위반 단속이 느슨해진다.

왕복 2차선 도로로 이뤄진 소도시 지역 중심가에서는 상인들이 가

광주 김남일의원, 전남 구충곤의원 시·도의회 예결위원장 선출

광주시의회 예결위원장 김남일(민주·비례) 의원이, 간사에는 이명자(우리·비례) 의원이 선출됐다. 전남도의회 예결위원장은 구충곤(민주·화순1) 의원이, 간사에는 송주호(민주·안도2) 의원이 각각 뽑혔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2일 오후 각 상임위와 의장이 추천한 예결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를 열어 이같이 선출했다. 임기 1년인 예결위원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19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2일부터 13일까지 각각 12일동안 정례회를 열어 2006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의, 의결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름엔 특히 아로나민 씨플러스 피로는 풀고 피부는 건강하게!

여름엔 두더위와 강한 자외선으로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과할 활성산소는 피로와 피부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유난히 더운 여름, 피부를 풀어주는 비타민 B군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베타민D-토 킬레는 미연동 활성화제가 보강된 아로나민 씨플러스로 피로는 풀고, 피부도 건강하게 지키세요.

아로나민 씨플러스

비타민 B군이 보강된 아로나민 씨플러스는 피부노화 예방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름철 더운 날씨에 피부를 풀어주는 베타민 D-토 킬레는 미연동 활성화제가 보강된 아로나민 씨플러스로 피로는 풀고, 피부도 건강하게 지키세요.

아로나민 씨플러스는 피부노화 예방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름철 더운 날씨에 피부를 풀어주는 베타민 D-토 킬레는 미연동 활성화제가 보강된 아로나민 씨플러스로 피로는 풀고, 피부도 건강하게 지키세요.